

| 신년 기획대담 |

노동존중사회 정책 곳곳이 추진되어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노동존중사회 실현할 핵심 수단

- **일시** 2019년 2월 1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경사노위 7층 중회의실
- **사회** **우태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획위원
- **참석**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 **배석** **이세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무관

지난 2017년 5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모토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진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노력은 마침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식 출범으로 이어졌다. 격월간 <사회적 대화>는 신년을 맞아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올 한 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년 기획대담은 지난 2월 1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공공상생연대기금재단 이사장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비판사회학회 회장
서울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전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서울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태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획위원



경제 패러다임이 변했다

우태현 지난 1년간 경사노위에서는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것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의 사회적 대화를 평가하고 2019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명준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이 2019년 사회적 대화 운영에 관해 발제를 하고, 토론거리에 대해서 의견을 받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논의를 할 때, 원론과 외국 사례보다 우리 사회적 대화의 현실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준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노동존중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국정 과제에서 부여받은 기조인데, 그 기조를 2019년 새로운 조건 하에서 어떻게 이뤄나

가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태현 2017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마련'이라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이후 7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관련된 노동정책의 열개를 꾸렸습니다. 9월에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 사회적 대화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과제를 두고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습시다만, 효율적으로 진행되진 않았습시다. 2월 초에 5개 의제별위원회에서 결과를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시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특징이었습시다만, 아직 안 꾸려졌습시다. 2월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으리라 예측되는데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3개 업종별위원회를 제안했습시다. 그 중에 금융산업, 해운산업, 버스운수산업만 운영되고 있고, 민주노총과 함께 제안했던 공공, 자동차, 조선, 철강, 서비스 모든 것이 민주노총 불참으로 중지됐습시다. 보건의료와 공공기관위원회는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부침을 겪었습시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 모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2018년 사회적 대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시다.

조영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최저임금, 사회복지 확대, 자영업자 카드 지원, 도시재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사회복지 확대가 핵심입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7월에 최저임금이 통과됐는데, 결과적으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었습시다만, 모든 대통령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

건 상황에서, 집권한 지 2개월 만에 최저임금 같은 중요한 대선 공약을 초반부터 지키지 않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16.4% 인상이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하는데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한 7월 즈음 시기가 지금 돌이켜보니 경기 고점으로 경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실제로 2017년 경제성장률이 3.1%로 당초 성장목표 3%를 넘어설 정도로 경제가 좋았습니다.

2018년에는 3% 경제 성장률에 32만 명 취업자 수 증가를 정책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KDI, 한국은행에서 3% 경제 성장을 전망했고, 3% 성장하면 과거의 경우에 비추어 32만 명 정도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상당히 낙관적 전망을 했는데 최저임금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나빠서 3% 성장 유지와 고용 목표 달성이 안 되겠다는 것을 2/4분기 가서 정부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보수 언론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위기가 발생한다는 논리가 시중에서 먹히기 시작했고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히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노동존중사회 정책에 대해서 조금씩 후퇴하는 조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여파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탄력근로제라든지, 최저임금 결정체계, 지역별·산업별 차등화 정책까지 논의됩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정부의 소신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노동존중사회 정책의 후퇴로 나타나면서 노동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나 하면, 제가 볼 땐 2.7% 성장을 했으면 그렇게 나쁜 성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잠재성장률 정도를 2.7~2.8%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상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15~24세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고용률이 악화된 건 아닙니다. 15~64세 고용률은 그대로입니다. 고용위기 상황도 아닌데 정부가 위축되면서 기업 쪽이나 보수 언

론 쪽의 의견을 수용하고, 노동존중사회 정책과 관련해서 후퇴하면서 경사노위의 정책적 활동범위가 상당히 좁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희 덧붙이자면 고용 참사가 포인트인데, 물론 취업자 증가 수가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생산가능인구가 몇 만 명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증가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 만큼 고용률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정부가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는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지난 고성장 시대의 마인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 패러다임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인구가 한 번도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물론 생산가능인구 전체는 늘어났지만 보편적 기준에 의한 은퇴연령 이후의 고령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이 변화된 패러다임을 완벽히 이해하고 관료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 와중에 경사노위는 정부 내 정책 조율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성공하기 어려운 구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철 KDI나 한국은행 거시경제 분석가들의 책임도 큼니다. 정부가 고용 목표를 제시할 때 KDI나 한국은행의 고용 전망 자료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정부가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엉터리 고용 전망을 한 KDI와 한국은행의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만큼
고성장 시대의 마인드 대체할
새로운 전략과 정책으로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2, 3월에 고용증가 전망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KDI나 한국은행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빨리 수정된 고용 전망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KDI의 태도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보수 언론의 고용 참사 관련 무차별적인 공격을 수수방관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KDI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고용 증가 둔화 원인을 신속하게 자료로 제공했으면 청와대가 보수언론의 고용 참사 공격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2018년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노동존중사회 정책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2016년,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도시가구소득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구소득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분위, 2분위 소득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근로자가구소득 감소가 아니라 근로자 외 가구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영업자소득이 정체 상태에 있고, 실업자 내지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가구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최저임금이 가구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실질임금이든 시간당 임금이든 2015년, 2016년 상승률에 비해서 2018년 상승률이 이전보다 월등히 높았고, 가구소득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민간소비증가율이 그 이전에 비해서 2.8%로 높은 수준이었고, 건설경기가 성장률을 무려 0.7%p 하락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2.7%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소비가 성장을 견인했기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KDI나 한국은행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정된 고용 전망을 제시했다면
언론의 공격에 유연하게
대응했을 것

때문입니다. 민간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 포기할 때 아니다

이병훈 노동존중사회는 큰 패러다임에서 소위 시장주도나 기업주도성장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래로 부터 소득을 끌어 올리는 정책이 한 흐름이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뒤틀리게 되었는지를 보려면 현재가 어떤 상태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상징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접혀진 상태고, 노동존중사회는 언급도 안 되면서 11월, 12월에는 경제 활력이 화두가 됩니다. 소득주도성과 노동존중은 거의 뒷전에 둔 상황까지 왔습니다.

조영철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원래는 임금주도성장입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자영업자 비율이 24% 정도 되니까 이름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영업자의 소득통계를 보면 정체 상태입니다.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일반 국민들이 소득주도성장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노동존중사회 정책에서 후퇴한 것이 적절했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최저임금 정책이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실질임금 상승이나 근로자 가구 소득 증가나 민간소비 증가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최종적으로 나온 한국은행 GDP 결과를 봤을 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한 번 밀어붙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진 여러 지표들을 살펴보면 EU나 OECD 국가들처럼 일정정도 제도화된 나라들에서는



2.5% 전후가 기본 경제성장률인데 이걸 더 인상시키는 것이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과도하게 경제가 더 성장할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63번이 노동존중사회 실현, 64번이 차별 없는 일터 실현이고, 71번이 일과 삶의 균형에 관련된 것입니다. 또 그 사이에 여성 관련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 정부에서 제도화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故 김용균 씨 문제로 산안법이 통과됐지만,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기간제법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정부나 여당에서 입법 발의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예전 노사정위 공익위원 합의안이 있지만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촛불 이후에 기대를 받았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룰 세팅(Rule Setting)을 정부가 일방통행으로 해버린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현장에서 노동존중사회를 신뢰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노동조합에서 볼 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구조가 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약 41가지 법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최저임금은 정부가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홍보를 너무 간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장애요인인 자영업 문제에 대해 동면의 양면처럼 정부가 “이렇게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을 같이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결여되니 자영업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상여금이 바뀐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법이 결정된 순간 임금체계를 다 바꿔버립니다. 기업별 구조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에서, 이 문제는 3개월 후에 현장에 곧장 닥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현장 노동자들한테는 최저임금은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타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불이익을 주는 정책으로 다가오니 다수의 조직된 노동자들은 이 두 정책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2019년 다시 사회적 대화를 논의하려면 ‘물 세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태현 네 분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문재인 정부가 정책기조 전환의 위기를 겪고 있다. 경제 지표들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데, 보수언론의 담론 정치에 발목이 잡혀 있고, 정부 역시도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으로만 풀려고 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진폭에 따라 정치기조가 변화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 노동존중사회가 실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의 담론 정치는 물론 정치를 풀어나가는 여당 엘리트들의 리더십이나 역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 역시 지금 포기할 때는 아니라는 것도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조영철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 부작용을 해결하는 현 정부의 접근방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한다든가, 최저임금을 어떻게 고친다거나, 노동의 비용 상승 부분을 낮춘다거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같은 방식입니다. 오히려 더 크게 주고받기 식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를 강화하거나 노동

존중사회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원래 계획보다 신속하게 확대한다든지 하는 식의 다양한 방식이 있었는데, 너무 최저임금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 대응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주희 자영업자가 힘든 것도 당연히 예측 가능했고, 도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힘든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을 줘서 몇 년 어떻게 살게 해준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불가피하게 구조조정과 연관되죠. 존속 가능성이 없는 저임금 저부가가치 자영업은 일부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생계보전과 재훈련 지원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임금노동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작업이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졌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꾸 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렇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가장 가파르게 임금이 상승한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부담이 높아지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임금 외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술혁신도 하고, 마케팅전략도 새로 짜고, 가진 인적자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등등. 임금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갑자기 지원해주는 것은 이런 혁신을 시도할 기회조차 뺏어버리는 단기적인 전략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영철 최저임금이 구조조정 효과가 있는 건 명확합니다.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의 고용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임금소득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활성화,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효율성 증가 등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용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한국 사회에서 구조조정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예상됐다면 일자리안정자금만으로 흡수할 수 없었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내수 활성화라든지 사회복지 완충장치가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미비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강력한 확장재정정책을 써야 했는데 예상

치 못한 초과세수로 긴축으로 갔습니다. 긴축재정은 내수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44%가 집 없는 전월세 가구인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전월세 상승으로 생계비까지 올리는 타격을 준 것입니다. 정책적 실수가 컸습니다.

이병훈 정부 정책이 실종되거나 정부 정책 기조가 후퇴되는 가운데, 다들 소득주도성장이 맞다, 내지는 노동존중사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여전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선 어떻게 정책을 펴야 할지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사회적 대화, 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박명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처방과 관련해서 정책적 차원의 실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룰 세팅(rule setting)문제도 그렇고,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의 보완책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주희 사회적 대화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되려면 적어도 노동계가 산별체계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산별이 아니라면 조율할 수 있는 기제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특히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보드시피, 굉장히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표를 던져 결정했습니다. 반면에 보통 해외에서는 노동조합 지도부가 우리는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조합주의적인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 굉장히 어려운 노동계 차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반적인 노동존중사회 후퇴와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는 것을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료 중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혹은 관심이 있었던 관료가 있었는지 매우 의심됩니다.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화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기능에 따른 이해대표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와서 대화를 해라’, 그런 다음에 1월 말까지, 2월 말까지 안 되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기능을 인정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처음부터 논의해서 대안을 내놓으라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만약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국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해보다가 안 되면 국회로 가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 대화 참여자들의 갈등만 고조시키고, 사회적 대화의 주된 기능을 비롯한 다른 부수적으로 유용한 기능도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통 사회적 대화가 되려면, 경제위기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직은 경제위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양극화뿐입니다.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에 대해 어떻게 해줘야 할까, 이것은 거의 위기 상황인데, 사회적 대화의 모든 파트너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할 때, 저는 노동조합이 주체로 와서 의제도 던지고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왜곡되었던 노동법과 제도가 노동조합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잘 크지 못하게 만들어 놨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해야 할 사회적 요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문제에 대해서 정치력과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노동을 경제에 딸린 맹장처럼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과 경제, 어떤 걸 포기할 상황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합니다. 또 재계는 집합적 자본으로서의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체를 보는 눈, 장기적으로 집합적 자본의 이득이 극대화되려면 노동을 파트너로 삼아 그들의 역량 역시 제고해야 한다는 관점을 갖춰야 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노동의 양극화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걸 풀려는 의지가 없다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회적 파트너들이 갑자기 조율력을 향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부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병훈 사회적 대화는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틀도 바꾸고 한국형 사회적 대화를 국정과제로 했을 때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회적 대화라

는 것은 정부의 들러리 내지는 정책 결정 절차의 요식행위였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벗어나서 노사중심주의, 노사가 정말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 협의와 타협의 장으로 탈바꿈하는 식의 변화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20여 개월을 지나면서 처음에는 뭔가 할 것처럼 큰 화두를 던졌는데, 진행하면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 안타깝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틀을 바꾼 지금 우리가 노동존중사회를 다시 꺼낸 이유가 촛불 당시의 아우성을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의 치열한 함성들을 하나로 모아낸 개념이 노동존중사회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존중사회가 여전히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이자, 우리나라를 과거로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좀 더 희망차고 행복한 상태로 나아가는 길이 노동존중사회입니다.

지금의 경제 상태가 어렵다고 체감되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환의 위기에서 정부가 일자리 정부다, 뭐다 한 것은 정부의 지나친 과욕이었거나, 사실 그런 위기를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사가 주체가 되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조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노동존중사회를 묻기 위해서라도 경사노위라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확장된 노사가 같이 사회적 대화의 필요를 느끼고, 정부의 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주체들이 협의하고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경제 위기를 풀기 위해선
일자리 정부라는 네이밍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만들어야

김종진 제가 최근에 젊은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문법'이 다릅니다. 사회적 대화의 지향도 다릅니다. 조직된 노동은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죠. A노동단체는 여기 들어와서 타임오프제를 풀어야 하고, B노동단체는 다른 방식으로 교섭을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조차 못 찾는 것을 풀어주기를 사회적 대화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사회적 대화에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노동의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주체가 참여할 공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대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연구자들은 상층의 사회적 대화가 안 되니, 중범위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업종별로 이렇게 하자는 식이죠. 문제는 업종별 사회적 대화가 어떤 의미인지도 요구하는 사람들에 따라 접근방법과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 네이버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었겠습니까. 2030세대 회사 직원들이 자기계발도 가능하고, 임금수준도 낮지 않고, 정규직 고용인데, 불가능할 것 같던 IT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최근에 억압된 직장 내에서 '갑질문화' 등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직장에 만연해 있고, 청년들은 사회적 대화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별 위원회만으로 그걸 해소해줄 수 있을지 잘 와 닿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라는 쟁점만이 아닌, 더 큰 수준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노동의 방향'이 논의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노동 조직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넓어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안 갈 수도 없을 겁니다. 경사노위 참가에 찬성하지 않는 대의원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이 들어가서 다른 미조직 90%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경사노위라는 공간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 방향에서 조직된 노동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 대화 참여도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협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신뢰 쌓아야 한다

우태현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고,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입니다. 여기에 지난 5월에 이어 정부가 제기한 최저임금 문제와 탄력근로제 문제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누적되어온 양극화와 당면한 경제 위기를 사회적 대화로 극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희 노동계의 경우 사회적 대화에, 예를 들어서 스웨덴에 LO같은 노총이 참여하는 것은 그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사민주의 정당, 정권의 지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하면 그게 다 정책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잘한다, 잘 못한다 얘기를 해서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바뀌면 좋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큰 곳은 재계나 노동계가 아닌 정부입니다. 경사노위를 만들었을 때 정부는 뭘 주고 뭘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을까를 가끔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왜곡된 경제 구조인데, 이 문제는 경사노위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사회적 임금을 충분히 확충하여, 양극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들, 임금체계나 기업 복지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해 노동계도 논의할 수 있도록 큰 이슈를 던지고 들어오도록 유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들만 사회적 대화의 주제로 요구했던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병훈 저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 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대한민국에서 첫 사회적 대화기구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있었습

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사회적 대화도 겉만 바뀌었지 실제 돌아가는 것들은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게 솔직한 현실 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하려는 사람은 사실 경사노위 외에는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마지못해 끌려오는 거죠.

경영계는 시장에 맡기면 되는 거고, 관료들은 협의한다고 이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게 못마땅하고 사회적 대화가 번거롭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그나마 도와 줄 존재가 노동계인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못해 엇박자가 나고 있죠. 정부에 대한 실망, 반발이 대의원대회에서 불참으로 귀결된 측면도 있지만, 좀 더 전략적으로 노동계가 주체적으로 노동존중사회든 뭔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의 불참 결정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이런 조합 속에 서있다 보니까 집권 세력의 의지와 전략적인 판짜기가 중요하고, 그것을 미션으로 받아서 풀어나가는 사람들의 역할이 사회적 대화를 채우는 데 중요합니다. 그나마 대통령이 의지를 신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로드맵을 경사노위에서



마련하겠다는 제스처를 계속 하니까 유지되는 거라고 봅니다.

처음 5개월, 10개월 동안에는 촛불에서부터 되어 왔던 개혁의 여망 때문에 아마 경영계가 굉장히 숨죽이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균열이 생기다 보니 까 관료는 관료대로,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자기주장을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는 서구에서처럼 제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가지고 어떻게 바꾸겠다, 개혁을 하겠다,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끝어나가겠다는 능력과 의지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를 풀어나가기는 간단치 않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합의한 게 무척 많아요. 그런데 힘 있게 한 게 사실 없어요. 노사가 전폭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회나 국민들이 이걸 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면 그만큼 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동안의 과정은 정국의 흐름과 맞물리면서 주체들이 원심적으로 움직이는 판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새로운 흐름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실력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주희 민주노총이 지난해 초에는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때 들어왔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쯤 나갔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노사정의 실력이자 역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단시간에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노동계가 못 바뀌는 것처럼 관료도 하루아침에 바뀔 일도 없죠. 그래서 사회적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에다가 너무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마치 민주노총이 안 들어와서 끝장이 난 것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고, 타협을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노사정이 모여서 타협 가능한 것들을 한두 개라도 해내고, 그 과정에서 서로 신뢰가 조금이라도 쌓이고, 다른 문제를 얘기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좋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김종진 사회적 대화는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운동장인데, 이득이 있어야만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노동에 크게 이득이 없어도 논의할 수 있는 의제가 사회안전망 같은 주제입니다. 사실 노동조직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의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보험은 사회보험료 납입 주체로서 노동조직이 약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의제입니다. 그렇기에 양대 노총이 사회적 안전망 중 사회보험에 개입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청년들은 취업을 하더라도 적성이나 전망 그리고 노동조건 불일치 등으로 1년 미만에 퇴사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문제는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양대 노총이 청년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자발적 이직자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사회적 안전망 주요 의제를 올리면서 논의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민주노총에 아쉬운 게 있습니다. 조직 내 사회적 대화가 부족하더라고요. 노동조합은 내부 토론 문화가 민주주의 핵심인데, 예전에 비해 많이 성숙된 측면도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대화 참여 안전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충분한 내부토론의 과정이 필요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보면, 대의원들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조직 내 토론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당일 처음 참석한 한 대의원은 사회적 대화 논쟁의 맥락을 잘 모르시고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대의원 대회에서 상호 다른 사고와 생각을 설득하고 국민들 동의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대화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상상력을 반영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우태현 지금까지 2018년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2019년 사회적 대화에 대해 얘기했으면 합니다.

조영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현실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현실 과제를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 정부가 경사노위에 대

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사노위는 주고받기 식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장기 과제로는 뭐가 있는지를 정말하게 판단해서 경사노위한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사노위는 결국 총자본하고 총노동이 타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총자본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총노동도 마찬가지고. 특히 총자본을 대표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는 정말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엔 최소한 보수 언론이 총자본을 대변해주기라도 하는데, 한국의 언론은 그러지 못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는 나름대로 총자본과 총노동의 협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식적 틀이고, 중장기 과제와 관련해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이나 실업구조,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 완화 같은 과제, 문재인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훈 경사노위가 최소한 정부 정책에 들러리 서는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탄력근로제 같은 주요한 현안이 있잖아요. 정부나 국회가 부담되는 것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려고 하는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은 분명히 선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도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사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타협하고 그걸 정부나 의회에 보내서 정책화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노사의 불신이 크고 자기 것만 챙기려 할 뿐 타협할 줄 모릅니다. 그런 태도로 여기에서 뭔가 이뤄내기는 힘든 조건이에요. 여기서 생산적인 일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중장기적 과제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가려져 있는 부분을 챙기는 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대립에 대해서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지만, 사각지대나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것들을 합의하고 그걸 정부에게 요구해 정책

화한다면 실효성 있게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 직위원회에서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주가 되어서 그런 주체를 끌어 모으고 일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환의 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중대 현안에 정부 여당의 들러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바로잡고, 조정 능력을 발휘하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교과서적으로 사안을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만들어진다면 색다른 제안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희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구조적인 여건도 갖추지 못했고, 아직도 미치 복지국가를 잘 만들지도 못했지만, 고령화 때문에 복지국가의 위기도 함께 맞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대화의 기능과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주고받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회적 대화를 주고받기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거 같아요. 노사 모두 얻는 게 있는 논의주제도 있거든요. 미국 위스콘신 지역 노사정 훈련 파트너십처럼 사측도 이득을 볼 수 있고, 노측도 이득을 볼 수도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화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빅 비즈니스는 인센티브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로비하거나 국회를 통하면 될 테니까요. 사측이 그래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임금구조 개편이 아닌가요. 사측 마음대로 월급 잘 안 오르는 형태의 직무급으로 개편하자는 게 아니고, 사회적 임금과 형평성 있는 임금체계 개편을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자는 겁니다. 타결이 안 돼도 그에 대한 사측의 의견, 노측의 의견 다 듣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뭔지 정리하는 것만 해도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와줘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가 원하는 걸 정부가 들어주라는 뜻이 아니고요. 노동계가 정책역량이 부족합니다. 노동계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스스로 모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우고 의제도 만들 수 있게 하는 일을 사회적 대화기구가 도와준다면 그

걸로 충분합니다.

사회적 대화 의지가 이만큼이라도 있는 정부는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탄력근로제 합의해라, ILO 합의해라, 이런 부담을 정부가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사관계의 큰 문제점은 임금에 모든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것이거든요. 꼭 타결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임금 같은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타결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박명준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고민하면서 협의기구냐 합의기구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흐지부지 됐는데, 어떤 전문가 분은 합의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민주노총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더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이주희 선생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대화가 제로섬게임은 아니라는 거죠. 노동존중사회가 되면 자본에게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경영계 분들과고 자리를 가졌어요.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면 개별기업들이 기업복지로 지출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거기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더니 공감하더라고요. 그런 포지티브섬(positive sum) 게임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을 같이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와 행정부가 합의하라고 주는 것들이 아니라, 협의기구로서 충분한 전문성을 배양하면서도 주체들을 키워주는 센터로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노동존중사회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이 함께 이익 얻는
포지티브섬 게임

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병훈 민주노총이 들어오지 않아도 소상공인위원회에서 그런 의제는 논의할 수 있겠죠.

우태현 우리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및 복지 수준은 스웨덴 수준 이상이잖아요. 의료비, 학비, 주거비 다 기업에서 지원합니다. 사회적 임금으로 보편적으로 보장해주면 다 필요 없는데, 사측은 정부에 대해서 뭔가 전략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태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획위원

이주희 그런 콘셉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콘셉트를 넣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박명준 조영철 교수님이 초반에 KDI나 우리나라 주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담론이 현실의 어느 한 방향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사회과학자들이 새로운 상상력, 정책적 상상력을 불어넣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적 대화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관료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

우태현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정의를 보면 공식, 비공식 대화를 통한 정보교환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거의 없어요. 노사정이라고 할 때 정부는 정권과 관료가 엮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회적 대화에 관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해태하는 경우도 많고요. 정권의 역할이 중요한데,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나가려 하는 걸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통제도 못하고, 이끌고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병훈 그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이슈는 아닙니다. 이 정부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이 기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무게를 실어주는가에 따라서 참석하는 관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국장에서 과장, 과장에서 사무관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경사노위에서 다루는 안에 무게가 실려지지 않다는 것이고, 갈 이유를 못 찾는 거죠. 만약 경사노위 위원장이 국무회의 때나 아니면 별도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이런 자리에 거듭 나오면 각 부처도 경사노위를 무시하지 못하겠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은 사회적 대화보다는 기재부 중심의 경제 살리기라는 흐름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관료들도 경사노위에 신경을 쓰거나 노동계에게 시달리기도 하는 비켜서겠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노사는 물론 관료까지 주체들에게 사회적 대화가 하나의 DNA처럼 인식돼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런 정도까지 이르기에는 한참 먼 상태이니 상층의 의지를 끌어내고 계속 움직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정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주희 대통령이 여기 열 번 나오더라도, 이미 관료들한테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의지의 메시지가 충분히 갔기 때문에 크게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바꾸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또 경사노위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결국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네요.

박명준 2019년을 맞이하면서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지, 올해 큰 성과를 보겠다거나 거기에 집착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주희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사회적 대화라면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른 방식, 예컨대 청년 세대들이라든지 이런 쪽을 염두에 둔 사회적 대화, 새로운 상상력이나 요구들을 반영한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진 양대 노총이 몇 가지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사회적 협의인지, 합의인지 논란도 있겠지만, 기능적으로 어렵게 출범한 경사노위에 등가성의 원리,

즉 노동계에서 부위원장이나 나오면 정부에서는 적어도 실장급 이상 나온다는 조건이라든가, 물적·인적 자원의 대등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경사노위 인데 작년 예산이 고작 4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결과론이지만 민주노총이 들어와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시점을 놓친 것도 있고요. 다시 사회적 대화 논의가 시작된다면, 기술적이지만 그런 사회적 대화기구의 운영의 몇 가지 전제조건 등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목적이나 의제뿐만 아니라, 기능적 문제도 양대 노총이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영철 노동정책이 후퇴했다고 표현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지금까지 추진한 노동존중사회 정책이 대선 공약에서 목표한 것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사회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문제가 기대와 달리 악화되고 있고, 이 추세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자영업자 소득도 개선되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 정책을 펴고 난 이후, 그 이전 정부에 비해서 근로소득 증가, 임금 증가, 비정규직 감소, 임금격차 감소 등 성과가 뚜렷합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이전 정부에서보다 현격한 증가고 이런 것들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한테 빚진 것도 있죠. 임금 소득 증가 이런 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단결력에 의해서 쟁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를 비난만 하지 말고 협조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존중사회가 기대만큼 나가지는 못했지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물론 해야죠. 실업부조제도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익위원회에서 안을 냈지 않습니까? 경사노위에서 합의해서 정책 건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번에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겠지만,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우태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대화도 전환기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다시 마련하기로 하고 오늘 기획대담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